

문재인 정부 육아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¹⁾

- 2021년 부모, 전문가, 기관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김근진 부연구위원

문재인 정부 4년차에 해당하는 2021년을 기준으로 육아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1-3학년) 부모, 학계 전문가(유아교육, 보육, 사회복지, 경제, 행정 등), 기관(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교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육아정책(현금 및 의료비 지원,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범주별 성과를 분석하였다. 부모조사와 전문가 조사에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가장 성과가 큰 정책으로는 '육아휴직제도'와 '아동수당'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장 성과가 미흡한 정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나타났다. 부모조사와 전문가 조사에서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으로 한정 시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로 나타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기관 조사에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 서론

2021년은 문재인 정부 4년차에 해당하는 시기로 2022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문재인 정책의 육아정책을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의 3개 범주로 구분하고,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1-3학년) 부모, 학계 전문가(유아교육, 보육, 사회복지, 경제, 행정 등), 기관(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교사)을 대상으

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 성과 및 향후 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제시할 부모 및 전문가 조사 결과는 육아정책 범주별로 성과가 가장 큰 정책, 성과가 가장 미흡한 정책,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기관조사(유치원 및 어린이집 조사) 결과는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중 특정 정책에 대한 원장 및 교사의 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육아정책 부문 및 세부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본고는 2021년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김근진·유해미·조혜주)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임.

〈표 1〉 본 연구의 육아정책의 범주 및 세부정책

부문	세부정책
현금 및 의료비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수당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예유파인 도입 등)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6. 보육서비스 질 제고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8.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9.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10.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11.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자녀돌봄 시간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육아휴직제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 배우자 출산휴가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본 연구의 부모 설문조사는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1-3학년) 부모 2,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전문가 조사는 학계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분야별로 유아교육 35명, 보육 40명, 사회복지·경제·행정 등 25명으로 구성하였다. 어린이집 조사는 원장 133명, 교사 1,141명 총 1,27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치원 조사는 유치원 원장 46명, 교사 152명, 총 19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의 성과 평가

부모 및 전문가 조사에서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각각의 부문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3개 정책 부문을 합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성과평가에는 성과가 가장 큰 정책, 성과가 가장 미흡한 정책,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을 질문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해당 문항의 결과를 중심으로 성과평가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각각의 부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있으나, 각각의 부문에 포함되는 정책의 수가 많지 않고, 3개 정책 부문을 합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이 성과가 가장 큰 정책, 성과가 가장 미흡한 정책,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기 때문에,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의 성과 평가 결과는 전체 육아정책 기준의 응답 결과를 제시한다.

가. 부모조사 결과

1)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부모조사에서 현 정부의 전체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한 질문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제

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26.8%, ‘아동수당’ 26.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육아휴직 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와 ‘아동수당’을 선택한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첫째아 기준으로는 영아부모는 ‘육아휴직 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가 30.8%로 가장 높았으나, 유아부모

〈표 2〉 전체 육아정책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26.6	2.8	1.4	2.5	2.3	1.0	1.3	1.1	1.8	1.5
성별										
남성	28.7	2.4	1.6	1.8	2.3	1.2	1.5	1.2	1.7	0.7
여성	23.4	3.4	1.0	3.5	2.1	0.6	1.0	0.9	2.0	2.5
$\chi^2(df)$					62.913*** (18)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24.7	3.9	2.4	3.1	2.7	0.3	0.5	0.8	0.8	1.9
유아부모	29.5	1.8	0.9	3.1	2.1	1.0	1.8	1.6	1.6	2.2
초등부모	25.4	2.9	1.0	1.5	2.0	1.4	1.5	0.7	2.7	0.4
$\chi^2(df)$					138.459*** (36)					
맞벌이 여부										
맞벌이	22.8	2.3	1.3	2.5	2.5	0.8	1.1	1.4	1.8	1.7
외벌이	30.3	3.7	1.1	2.4	2.0	1.1	1.7	0.8	1.9	1.2
해당없음	30.7	0.0	3.5	3.5	1.8	0.9	0.0	0.0	0.9	0.9
$\chi^2(df)$					55.288* (36)					
지역구분										
대도시	25.3	3.5	1.8	2.2	3.4	1.3	1.6	1.7	1.7	1.2
중소도시	27.3	2.0	1.0	2.6	1.5	0.9	1.1	0.5	1.7	1.3
읍면	28.0	3.4	1.1	3.1	1.1	0.0	1.1	0.8	2.3	2.7
$\chi^2(df)$					55.662* (36)					
구분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계(수)	
전체	0.6	4.1	3.0	0.6	26.8	7.3	5.2	7.5	3.1	100.0 (2000)
성별										
남성	0.2	3.1	3.2	0.7	28.8	5.9	5.8	6.6	2.8	100.0 (1205)
여성	1.3	5.5	2.6	0.5	23.6	9.3	4.3	8.9	3.4	100.0 (795)
$\chi^2(df)$					62.913*** (18)					

구분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계(수)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0.7	0.8	2.9	0.8	30.8	7.8	6.9	6.1	1.9	100.0	(590)
유아부모	0.7	1.8	3.2	0.3	26.3	6.6	5.6	6.8	3.0	100.0	(677)
초등부모	0.4	8.7	2.7	0.7	23.9	7.4	3.4	9.3	4.1	100.0	(733)
$\chi^2(df)$	138.459*** (36)										
맞벌이 여부											
맞벌이	0.5	5.7	3.2	0.7	28.0	7.8	4.4	7.9	3.5	100.0	(998)
외벌이	0.7	2.5	2.5	0.5	25.5	6.9	5.7	6.9	2.7	100.0	(888)
해당없음	0.9	1.8	4.4	0.9	26.3	5.3	7.9	8.8	1.8	100.0	(114)
$\chi^2(df)$	55.288* (36)										
지역구분											
	0.5										
대도시	0.5	3.1	4.0	0.6	25.7	8.0	4.7	7.3	2.2	100.0	(817)
중소도시	0.4	4.8	2.7	0.7	27.3	6.9	6.0	7.7	3.6	100.0	(922)
읍면	1.5	4.6	0.4	0.4	28.0	6.1	4.2	7.3	3.8	100.0	(261)
$\chi^2(df)$	55.662* (36)										

주: ①아동수당 ②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③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④유치원·어린이집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⑤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⑥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⑦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⑧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⑨보육서비스 질 제고 ⑩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⑪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⑫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⑬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⑭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⑮육아휴직 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⑯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⑰배우자 출산휴가 ⑱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⑲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와 초등부모는 ‘아동수당’이 각각 29.5%, 25.4%로 가장 높았다.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 맞벌이는 ‘육아휴직 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가 28.0%로 가장 높았으나, 외벌이는 ‘아동수당’이 30.3%로 가장 높았다.

2)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부모조사에서 현 정부의 전체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한 질문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선택한 응답이 14.3%로

가장 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2.7%, ‘육아휴직 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12.6%,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11.8%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9.6%의 순으로 높았다. 부모조사에서는 성과가 가장 미흡한 정책으로 자녀돌봄 시간 지원 정책들이 선택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시간 지원 제도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많은 부모들이 해당 제도를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표 3〉 전체 육아정책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1.2	3.4	3.9	2.4	3.3	3.5	2.0	4.0	3.9	1.0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0.5	4.1	4.1	1.5	3.4	3.7	1.7	4.4	2.7	1.4
유아부모	1.8	4.0	4.1	3.5	3.0	3.5	1.3	3.8	3.5	0.9
초등부모	1.2	2.2	3.4	2.0	3.5	3.1	2.9	3.7	5.0	0.8
$\chi^2(df)$	54.036*(36)									

구분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계(수)	
전체	1.7	1.8	1.6	5.7	12.6	14.3	12.7	11.8	9.6	100.0 (2000)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1.5	1.7	1.0	6.1	12.7	12.2	13.2	15.4	8.6	100.0 (590)
유아부모	1.3	1.6	1.0	5.9	12.7	16.2	13.3	8.6	9.7	100.0 (677)
초등부모	2.0	1.9	2.6	5.2	12.4	14.2	11.7	11.9	10.1	100.0 (733)
$\chi^2(df)$	54.036*(36)									

주: ①아동수당 ②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③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④유치원·어린이집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⑤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⑥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⑦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⑧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⑨보육서비스 질 제고 ⑩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⑪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⑫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⑬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⑭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⑮육아휴직 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⑯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⑰배우자 출산휴가 ⑱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⑲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3)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부모조사에서 현 정부의 육아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을 선택하도록 한 질문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가 25.9%로 가장 높았고, ‘아동수당’이 17.2%로 그 다음 순위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조사에서 현 정부의 전체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한 질문에 대해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와 ‘아동수당’이 가장 높은 응답을 받은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나. 전문가 조사 결과

1) 성과가 가장 큰 정책

전문가 조사에서 현 정부의 전체 육아정책 중 가장 성과를 보인 정책을 선택하도록 한 질문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가 36.0%로

〈표 4〉 전체 육아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17.2	2.5	1.6	1.4	2.6	1.4	1.0	1.1	5.0	0.9
성별										
남성	20.7	2.3	2.0	0.8	2.8	1.4	1.1	0.7	5.6	0.6
여성	11.8	2.8	0.9	2.1	2.3	1.3	0.8	1.6	4.0	1.4
$\chi^2(df)$					99.033***	(18)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15.8	2.9	2.0	1.9	3.9	1.4	1.0	1.4	5.1	1.5
유아부모	19.1	2.4	1.8	1.6	1.6	1.8	1.3	1.0	4.4	0.4
초등부모	16.5	2.3	1.0	0.7	2.5	1.0	0.5	1.0	5.5	0.8
$\chi^2(df)$					72.752***	(36)				
맞벌이 여부										
맞벌이	13.5	1.5	1.7	1.2	3.2	1.4	1.0	1.2	5.2	1.4
외벌이	20.5	3.8	1.4	1.4	2.0	1.2	1.0	1.0	5.1	0.5
해당없음	22.8	0.9	1.8	2.6	1.8	1.8	0.0	0.9	2.6	0.0
$\chi^2(df)$					82.165***	(36)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23.9	0.6	0.0	3.1	1.9	0.6	1.3	0.0	3.1	0.0
251~350만원	19.5	3.3	1.8	1.5	1.8	0.6	0.9	1.8	5.3	0.6
351~500만원	19.6	3.8	0.8	1.3	2.5	2.3	0.8	1.1	3.9	0.7
501~600만원	11.8	2.2	1.5	1.2	1.9	1.2	0.6	1.2	4.6	1.9
601만원 이상	14.2	1.4	2.6	0.9	3.9	1.1	1.2	0.9	6.7	1.1
$\chi^2(df)$					109.795**	(72)				

구분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계(수)	
전체	0.7	4.9	2.9	3.8	25.9	8.8	6.9	7.5	4.3	100.0 (2000)
성별										
남성	0.5	3.2	2.3	2.3	27.5	7.9	7.9	6.2	4.1	100.0 (1205)
여성	0.9	7.4	3.8	6.0	23.5	10.2	5.3	9.4	4.5	100.0 (795)
$\chi^2(df)$										99.033*** (18)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1.0	2.7	2.7	3.6	27.6	9.2	7.3	6.3	2.9	100.0 (590)
유아부모	0.4	3.4	2.8	3.7	27.5	10.0	6.6	5.9	4.1	100.0 (677)
초등부모	0.5	8.0	3.1	4.1	23.1	7.4	6.7	10.0	5.5	100.0 (733)
$\chi^2(df)$										72.752*** (36)
맞벌이 여부										
맞벌이	0.5	6.9	3.2	3.9	24.8	10.1	5.5	8.8	4.8	100.0 (998)
외벌이	0.9	2.8	2.6	3.6	27.0	7.1	8.3	5.7	4.1	100.0 (888)
해당없음	0.0	3.5	2.6	4.4	26.3	10.5	7.0	9.6	.9	100.0 (114)
$\chi^2(df)$										82.165*** (36)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0.6	2.5	2.5	2.5	28.9	10.1	6.3	6.3	5.7	100.0 (159)
251~350만원	0.9	3.3	2.4	4.1	26.3	6.5	10.1	7.1	2.4	100.0 (338)
351~500만원	0.5	5.2	2.1	4.4	26.2	8.3	6.1	6.4	3.9	100.0 (611)
501~600만원	1.5	7.4	3.7	3.1	26.0	11.5	6.5	6.8	5.3	100.0 (323)
601만원 이상	0.2	4.7	3.7	3.7	24.4	8.8	6.2	9.7	4.7	100.0 (569)
$\chi^2(df)$										109.795** (72)

주: ①아동수당 ②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③건강 지원(남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④유치원·어린이집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⑤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⑥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⑦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⑧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⑨보육서비스 질 제고 ⑩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⑪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⑫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⑬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⑭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⑮육아휴직 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⑯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⑰배우자 출산휴가 ⑱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⑲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표 5〉 전체 육아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

구분	관련 국정과제	2021년 조사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아동수당	13.0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0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0.0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정책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7.0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5.0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3.0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2.0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0.0
	(6) 보육서비스 질 제고(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대체교사/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	1.0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2.0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0.0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2.0
	(1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6.0
	(1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0.0
	(1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1.0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36.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5.0
	(3) 배우자 출산휴가	8.0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4.0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3.0
계(수)		100.0(1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가장 높았고, ‘아동수당’이 13.0%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조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2) 성과가 가장 미흡한 정책

전문가 조사에서 현 정부의 전체 육아정책 중 가장 성과가 미흡한 정책을 선택하도록 한 질문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0%로 가장 높았고,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가 14.0%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조사에서는 성과가 가장 미흡한 정책으로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들이 주로 선택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조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3)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

전문가 조사에서 현 정부의 전체 육아정책 중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을 선택하도록 한 질문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가 27.0%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 조사에서 현 정부의 전체 육아정책 중 가장 성과를 보인 정책을 선택하도록 한 질문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조사 결과에서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 육아휴직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표 6〉 전체 육아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

단위: %(명)

구분	관련 국정과제	2021년 조사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아동수당	2.0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0.0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0.0
유아교육·보육 ·초등돌봄 지원 정책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0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1.0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2.0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1.0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9.0
	(6) 보육서비스 질 제고(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대체교사/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	7.0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0.0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1.0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1.0
	(1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6.0
	(1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0.0
	(1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9.0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12.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0.0
	(3) 배우자 출산휴가	7.0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14.0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6.0
계(수)		100.0(1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표 7〉 전체 육아정책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

단위: %(명)

구분	관련 국정과제	2021년 조사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아동수당	6.0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0.0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0
유아교육·보육 ·초등돌봄 지원 정책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0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6.0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1.0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0.0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6.0
	(6) 보육서비스 질 제고(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대체교사/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	12.0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4.0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0.0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1.0
	(1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8.0
	(1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1.0
	(1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2.0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27.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0.0
	(3) 배우자 출산휴가	5.0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4.0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3.0
계(수)		100.0(1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3.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의 성과 평가

가. 부모조사 결과

1)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부모조사에서 현 정부의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한 질문에 대해서는,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가 1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가 16.1%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첫째아 기준으로는 초등 부모의 33.4%가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를 선택하여 초등 부모가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에 대해 육아에 실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 부모가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맞벌이 여부 기준으로는 맞벌이의 21.5%가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를 선택하여 외벌이(15.1%)보다 맞벌이가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를 더

〈표 8〉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수)
전체	10.0	9.7	4.1	10.3	5.2	9.4	6.6	5.7	18.3	16.1	5.0	100.0 (2000)
성별												
남성	9.0	11.2	5.4	12.0	5.3	9.5	5.4	5.1	16.2	15.7	5.3	100.0 (1205)
여성	11.4	7.3	2.1	7.7	4.9	9.1	8.3	6.5	21.5	16.6	4.5	100.0 (795)
$\chi^2(df)$						48.060***(10)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12.0	12.2	2.7	8.8	5.1	9.0	11.0	7.3	7.6	17.8	6.4	100.0 (590)
유아부모	12.1	10.0	5.6	13.0	6.1	9.0	6.4	6.4	11.2	16.4	3.8	100.0 (677)
초등부모	6.3	7.2	3.8	8.9	4.4	10.0	3.1	3.7	33.4	14.3	4.9	100.0 (733)
$\chi^2(df)$						234.026***(20)						
맞벌이 여부												
맞벌이	9.7	8.6	4.1	7.4	5.1	9.8	8.1	6.1	21.5	16.2	3.2	100.0 (998)
외벌이	9.6	10.9	4.4	13.4	5.1	9.0	4.7	5.1	15.1	15.8	7.0	100.0 (888)
해당없음	14.9	8.8	1.8	10.5	6.1	7.9	7.0	6.1	14.9	16.7	5.3	100.0 (114)
$\chi^2(df)$						58.858***(20)						
지역구분												
대도시	10.3	10.6	5.6	10.9	5.4	9.4	5.3	5.6	15.3	16.8	4.8	100.0 (817)
중소도시	9.4	9.5	3.5	10.1	5.1	9.0	6.6	5.9	21.4	14.9	4.7	100.0 (922)
읍면	10.7	6.9	1.5	8.8	4.6	10.3	10.3	5.0	16.9	18.0	6.9	100.0 (261)
$\chi^2(df)$						35.692*(20)						

주: ①유치원·어린이집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②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③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퍼인 도입 등) ④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⑤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⑥보육서비스 질 제고 ⑦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⑧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⑨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⑩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⑪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많이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의 다수를 차지하는 초등돌봄교실이 맞벌이 중심으로 이용 아동을 선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부모조사에서 현 정부의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가 1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 15.0%,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12.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부모조사에서 현 정부의 유아교육·보육·초등

〈표 9〉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수)
전체	5.8	8.8	10.4	6.4	12.2	15.0	5.4	7.2	6.2	7.0	15.9	100.0 (2000)

주: ①유치원·어린이집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②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③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④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⑤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⑥보육서비스 질 제고 ⑦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⑧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⑨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⑩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⑪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표 10〉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수)
전체	5.7	8.9	4.7	7.7	5.1	19.5	4.9	4.4	15.9	13.5	9.9	100.0 (2000)
성별												
남성	5.6	10.9	5.7	9.0	4.7	21.1	4.9	4.3	13.1	12.4	8.2	100.0 (1205)
여성	5.9	5.9	3.0	5.7	5.7	17.1	4.9	4.4	20.0	15.1	12.3	100.0 (795)
$\chi^2(df)$						57.757***(10)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6.4	11.7	3.2	8.5	6.8	18.6	6.3	6.8	7.8	15.1	8.8	100.0 (590)
유아부모	7.7	8.7	6.5	10.6	4.6	17.6	5.0	3.4	12.4	12.9	10.6	100.0 (677)
초등부모	3.3	6.8	4.1	4.4	4.2	22.0	3.7	3.3	25.5	12.8	10.0	100.0 (733)
$\chi^2(df)$						147.614***(20)						
맞벌이 여부												
맞벌이	4.6	7.8	3.9	6.8	5.8	18.9	4.8	4.1	19.4	14.4	9.3	100.0 (998)
외벌이	6.5	10.2	5.4	8.7	4.2	20.9	5.2	4.4	12.2	12.2	10.1	100.0 (888)
해당없음	8.8	7.9	5.3	7.9	6.1	13.2	3.5	6.1	13.2	15.8	12.3	100.0 (114)
$\chi^2(df)$						40.137**(20)						

주: ①유치원·어린이집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②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③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④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⑤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⑥보육서비스 질 제고 ⑦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⑧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⑨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⑩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⑪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돌봄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을 선택하도록 한 질문에 대해서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가 1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이 15.9%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가 21.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이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 기준으로는 맞벌이는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이 19.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외벌이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가 2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 전문가 조사 결과

1) 성과가 가장 큰 정책

전문가 조사에서 유아교육·보육·돌봄지원 부

문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정책을 선택하도록 한 질문에 대해서는,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이 20.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16.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5.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조사에서 각 정책별로 가장 큰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제기되었다.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은 3~5세 유아교육 및 보육 일원화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유아 놀이권 보장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놀이 중심으로 교육 방식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인권 존중과 더불어 행복하고 창의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는 집에서 가까운 장소에 낮은 비용으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접근성이 제고되었고, 영유아 인구 감소 추세에서 국공립 비율이 증가함으

〈표 11〉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

단위: %(명)

정책과제	2021년 조사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0.0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16.0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8.0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5.0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1.0
(6) 보육서비스 질 제고	8.0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7.0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1.0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8.0
(1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5.0
(1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10.0
(1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1.0
계(수)	100.0(1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로써 정책 목표 달성에 다가갔다고 판단하였다. '초등돌봄 확대'는 돌봄 서비스 지원이 영유아 돌봄에 집중된 상황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맞벌이 가정 초등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에 대한 기여 등이 제시되었다.

2) 성과가 가장 미흡한 정책

전문가 조사에서 유아교육·보육·돌봄지원 부문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정책을 선택하도록 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가 2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19.0%, '보육서비스 질 제고' 17.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보인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제시된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는 정부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아동학대의 지속적 발생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는 교사 양성과 정 및 자격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전문성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서비스 운영시간 및 근무시간 등의 격차도 완화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처우개선 및 보수교육이 현장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불충분하고, 보육교사 자격제도 개편이 추진되지 않는 점이 지적되었다.

3)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

전문가 조사에서 유아교육·보육·돌봄지원 부문에서 향후 중요도가 가장 높은 정책을 선택하도록 한 질문에 대해서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가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16.0%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조사에서 향후 중요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제시된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표 12〉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약한 과제

단위: %(명)

정책과제	2021년 조사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4.0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6.0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5.0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2.0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19.0
(6) 보육서비스 질 제고	17.0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1.0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4.0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5.0
(1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0.0
(1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2.0
(1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25.0
계(수)	100.0(1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표 13〉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의 향후 중점과제

정책과제	2021년 조사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4.0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13.0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2.0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0.0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16.0
(6) 보육서비스 질 제고	34.0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7.0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0.0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1.0
(1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3.0
(1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2.0
(1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8.0
계(수)	100.0(1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양성과정의 개편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보육교사가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인력 지원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되었다.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는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보장 받아야 함에도, 유치원에 비해 교사 급여 지원, 근무시간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양성과정 일원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다. 기관 조사 결과

1)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의 달성 정도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는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이 51.9%로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 16.4%보다 훨씬 높았다.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의 달성 정도 질문에 대한

〈표 14〉 육아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구분	①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 모르겠다	부정 비율 (①+②)	긍정 비율 (④+⑤)	계(수)	5점 평균
전체	30.3	21.6	30.0	10.2	6.2	1.7	51.9	16.4	100.0 (1274)	2.39
원장/교사 구분										
원장	46.6	21.1	18.0	7.5	5.3	1.5	67.7	12.8	100.0 (133)	2.02
교사	28.4	21.6	31.4	10.5	6.3	1.8	50.0	16.8	100.0 (1141)	2.4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응답에서는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이 54.4%로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 15.2%보다 훨씬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교사 모두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의 달성 정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을 교육의 질적 편차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의 응답으로는 1순위 기준으로 '유아 담당교사의 처우 격차(급여수준 등)를 완화해야 함'이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유아반 시설 기준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줄여야 함' 22.5%, '유아 담당교사의 양성과정(자격)을 일원화해야 함' 16.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 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 정책 만족도에 대한 질문의 응답을 보면, 부정비율(전혀 만족하지 않음+만족하지 않음)이 '현장지원자료 개발 및 보급' 36.4%, '연수 및 컨설팅' 32.3%, '누리과정 시범운영 및 자료 공유' 35.9%, '홍보자료(학부모 지원자료 등) 개발 및 보급' 44.9%, '누리과정 포털 및 운영' 36.4%로 관련 5개 정책 모두에서 긍정비율(만족함+매우 만족함)보다 높았다.

〈표 15〉 유아교육 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부정 비율 (①+②)	긍정 비율 (④+⑤)	계(수)	5점 평균
전체	31.3	22.7	21.2	9.6	5.6	9.6	54.0	15.2	100.0 (198)	2.28
원장/교사 구분										
원장	43.5	28.3	21.7	4.3	0.0	2.2	71.7	4.3	100.0 (46)	1.87
교사	27.6	21.1	21.1	11.2	7.2	11.8	48.7	18.4	100.0 (152)	2.4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조사」의 결과임.

〈표 16〉 누리과정을 교육의 질적 편차 없이 운영하기 위한 우선 추진사항 (1순위)

단위: %(명)

구분	유아 담당교사의 처우 격차 (급여수준 등)를 완화해야 함	유아반 시설 기준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줄여 야 함	유아 담당교사의 양성과정 (자격)을 일원화해야 함	관할 행정부서를 일원화해야 함	유아 담당교사보 수교육 및 연수 과정을 공통으로 운영해야 함	누리과정 지원 장학 또는 컨설팅을 공통으로 운영해야 함	기타	계(수)
전체	37.2	22.5	16.0	15.6	5.8	2.3	0.5	100.0 (1274)
원장/교사 구분								
원장	24.1	18.0	23.3	29.3	3.0	2.3	0.0	100.0 (133)
교사	38.7	23.0	15.2	14.0	6.1	2.3	0.6	100.0 (114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놀이중심 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의 응답으로는 1순위 기준으로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음'이 54.0%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우선 필요한 정책에 대한 질문의 응답으로는 1순위 기준으로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이 57.6%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중심 누리과정 정착을 위해 '교사 대 유아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우선 조정해야 하는 반에 대한 질문의 응답으로는 1순위 기준으로 만 3세가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만 5세 43.5%로 나타났다.

〈표 17〉 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 정책 만족도

단위: %(명, 점)

관련 정책	①	②	③	④	⑤	해당	부정	긍정	계(수)	5점 평균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매우 만족함	사항 없음	비율 (①+②)	비율 (④+⑤)		
1. 현장지원자료 개발 및 보급	14.1	22.2	35.4	17.7	9.6	1.0	36.4	27.3	100.0 (198)	2.86
2. 연수 및 컨설팅	12.1	20.2	38.9	17.7	10.1	1.0	32.3	27.8	100.0 (198)	2.93
3. 누리과정 시범운영 및 자료 공유	14.1	21.7	36.4	19.7	7.1	1.0	35.9	26.8	100.0 (198)	2.84
4. 홍보자료(학부모 지원자료 등) 개발 및 보급	18.2	26.8	33.3	13.1	7.6	1.0	44.9	20.7	100.0 (198)	2.65
5. 누리과정 포털 개발 및 운영	13.1	23.2	34.8	19.2	8.6	1.0	36.4	27.8	100.0 (198)	2.8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조사」의 결과임.

〈표 18〉 놀이중심 누리과정 운영 어려움 (1순위)

단위: %(명)

구분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음	놀이 에 대한 이해 부족	추가 업무 부담 및 시간 부족	물리적 환경의 미비	학부모의 이해 부족 (학습에 대한 요구 등)	놀이중심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 부족	문서 작성 관리 (계획안, 평가 등)	기타	계(수)
전체	54.0	10.1	10.1	8.6	7.6	5.6	3.0	1.0	100.0 (198)
원장/교사 구분									
원장	19.6	19.6	17.4	13.0	17.4	6.5	6.5	0.0	100.0 (46)
교사	64.5	7.2	7.9	7.2	4.6	5.3	2.0	1.3	100.0 (15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조사」의 결과임.

〈표 19〉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우선 정책 (1순위)

구분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	문서 등 행정관리 간소화	물리적 환경 개선 지원	보조 인력 지원	교사 연수 강화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누리과정 포털 (i-누리) 활성화	놀이중심 누리과정 홍보 강화	기타	계(수)
전체	57.6	13.1	9.1	8.1	6.1	2.0	2.0	1.5	0.5	100.0 (198)
원장/교사 구분										
원장	15.2	30.4	13.0	10.9	13.0	6.5	6.5	4.3	0.0	100.0 (46)
교사	70.4	7.9	7.9	7.2	3.9	0.7	0.7	0.7	0.7	100.0 (15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조사」의 결과임.

3) 보육서비스 질 제고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보육 서비스 질 제고'의 달성 정도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은 43.2%로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 22.8%보다 훨씬 높았다. 원장과 교사를 구분한 응답에서는 원장은 긍정비율이 31.6%로 부정비율 26.3%보다 높았으나,

교사는 긍정비율이 21.8%로 부정비율 45.2%보다 훨씬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원장보다 교사가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의 응답으로는 1순위 기준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함'이 7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0〉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우선 조정해야 하는 반 (1순위)

단위: %(명)

구분	만 3세	만 4세	만 5세	계(수)
전체	48.9	7.6	43.5	100.0 (131)
원장/교사 구분				
원장	81.8	0.0	18.2	100.0 (11)
교사	45.8	8.3	45.8	100.0 (12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조사」의 결과임.

〈표 21〉 보육정책 달성도 인식 평가: 보육서비스 질 제고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부정 비율 (①+②)	긍정 비율 (④+⑤)	계(수)	5점 평균
전체	17.0	26.3	32.7	14.9	7.9	1.2	43.2	22.8	100.0 (1274)	2.70
원장/교사 구분										
원장	12.0	14.3	41.4	24.8	6.8	0.8	26.3	31.6	100.0 (133)	3.00
교사	17.5	27.7	31.7	13.8	8.1	1.2	45.2	21.8	100.0 (1141)	2.6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표 22〉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우선 필요사항 (1순위)

단위: %(명)

구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함	교사의 급여 수준이 개선되어 야 함	문서 양식의 통합 등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대체교사/보 조교사 등 지원인력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교사 보수교육 확대 등 보육교사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및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게 또는 정기적으로 확보	교사가 교육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함	기타	계(수)
전체	76.2	10.5	4.1	3.5	2.8	2.5	0.3	100.0 (1274)
원장/교사 구분								
원장	76.7	6.8	6.0	2.3	3.0	4.5	0.8	100.0 (133)
교사	76.2	11.0	3.9	3.7	2.8	2.3	0.3	100.0 (114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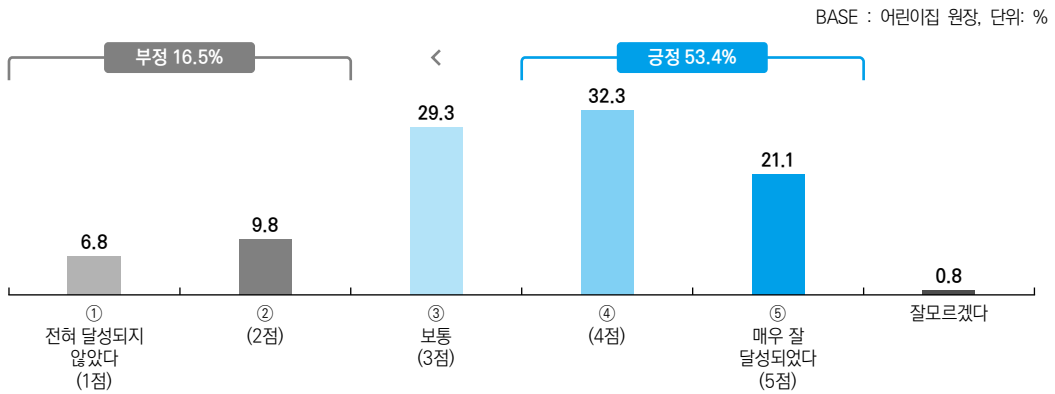
4) 보조·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한 ‘보조교사 지원으로 담임교사가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의 응답으로는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은 53.4%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16.5%보다 훨씬 높았다.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한 ‘보조교사 지원으로 담임교사의 휴게시간 보장’ 여부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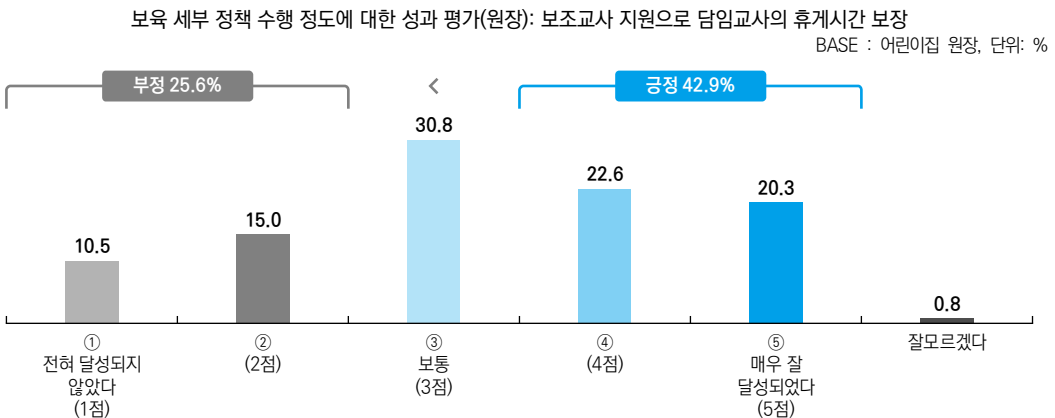
질문의 응답으로는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은 42.9%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25.6%보다 훨씬 높았다.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한 ‘대체교사 지원으로 보육의 공백에 대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의 응답으로는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은 41.4%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20.3%보다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그림 1]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원장): 보조교사 지원으로 담임교사가 보육활동에 전념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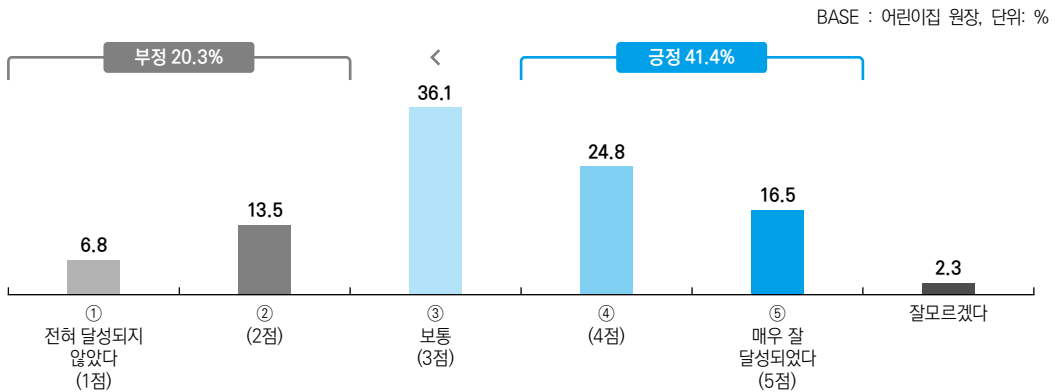
[그림 2]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원장): 보조교사 지원으로 담임교사가 보육활동에 전념

훨씬 높았다.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한 ‘보조교사 지원으로 휴게시간 보장’ 여부에 대한 질문의 응답으로는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은 24.5%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49.2%보다 훨씬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원장과 달리 교사는 현재의 보조교사 지원 정도가 휴게시간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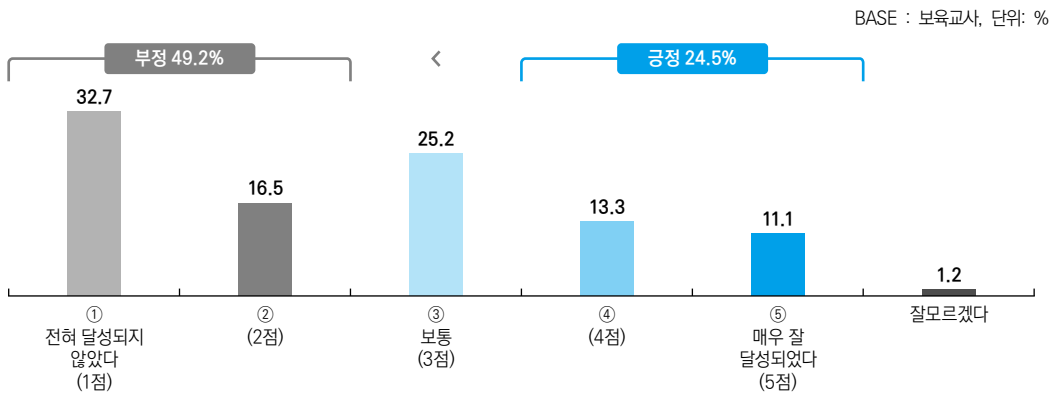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한 ‘보조교사 지원으로 보육활동 전념’ 여부에 대한 질문의 응답으로는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은 28.9%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40.8%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원장과 달리 교사는 현재의 보조교사 지원 정도는 담임교사가 보육활동에 전념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체교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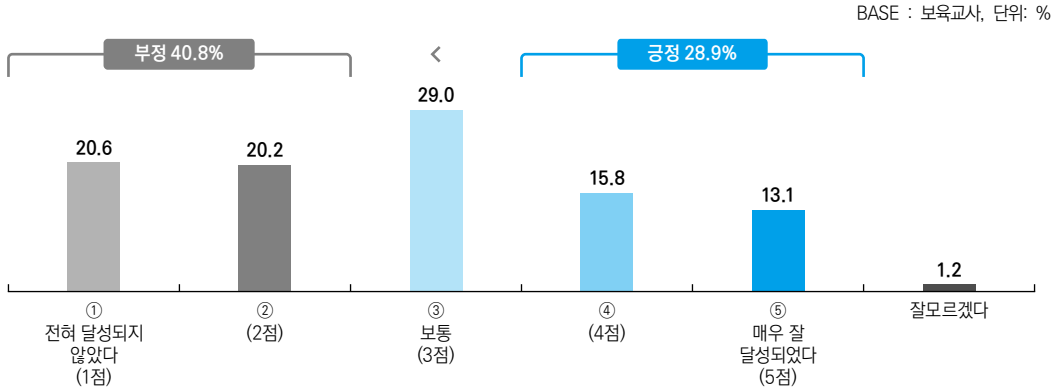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그림 3]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원장): 대체교사 지원으로 보육의 공백에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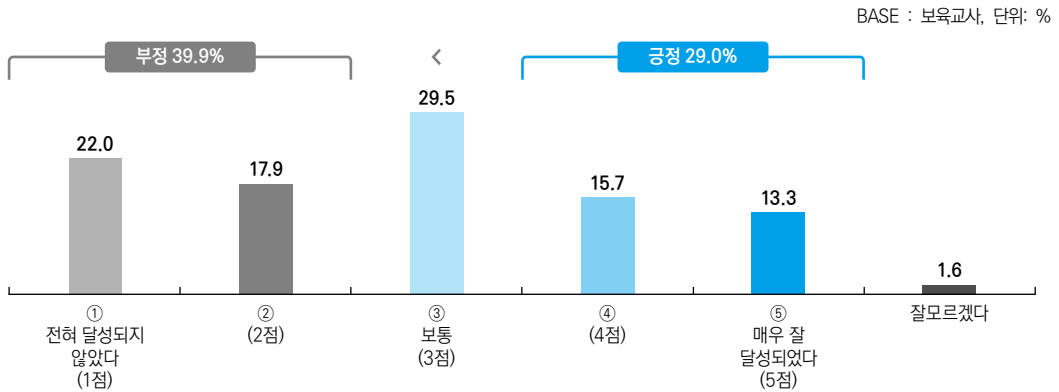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그림 4]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교사): 보조교사 지원으로 휴게시간 보장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그림 5]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교사): 보조교사 지원으로 보육활동 전념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그림 6]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교사): 대체교사 지원으로 일·생활 균형 가능

으로 일·생활 균형 가능' 여부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은 29.0%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39.9%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원장과 달리 교사는 현재의 대체교사 지원 정도는 담임교사의 일·생활 균형을 가능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4. 결론

가. 종합평가

부모조사와 전문가 조사에서 현 정부의 육아 정책 중 가장 성과가 큰 정책에 대한 질문의 응답으로는 공통적으로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동수당'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

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는 부모 조사와 전문가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다.

부모조사와 전문가 조사에서 현 정부의 육아 정책 중 가장 성과가 미흡한 정책에 대한 질문의 응답으로는 공통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육아정책이 아닌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 가장 성과가 큰 정책에 대한 질문의 응답으로는 부모조사에서는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전문가 조사에서는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 가장 성과가 큰 정책에 대한 질문의 응답으로는 부모 조사와 전문가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관 조사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모두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의 달성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 조사에서는 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치원 조사에서 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의 응답으로는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이 가장 높았다.

어린이집 조사에서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의 달성 정도에 대한 질문의 응답으로 부정 평가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조사에서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조사에서 '보조교사 지원으로 담임교사가 보육활동에 전념', '보조교사 지원으로 담임교사의 휴게시간 보장', '대체교사 지원으로 일·생활 균형 가능'에 대한 질문의 응답을 보면 어린이집 원장은 긍정비율이 높은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부정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나. 향후과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부모와 전문가의 평가는 전체 육아정책 중에서 가장 높았다. 전문가 조사에서 '육아휴직제도'의 수행 달성도를 높게 평가한 이유로는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과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지원금이 확대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 노력이 이루어지고 실제 남성의 이용률을 포함하여 전체 이용자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이 지적된다. 그러나 2020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실제 육아휴직을 한 비중)은 24.2%인데, 부는 3.4%, 모는 63.9%로 성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²⁾ 또한 2020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소속 기업체 규모별로 보면, 부는 종사자 수 300명 이상 5.1%, 50~299명 2.9%, 5~49명 2.0%, 4명 이하 1.2%이고, 모는 300명 이상 75.4%, 50~299명 71.9%, 5~49명 52.8%, 4명 이하 26.7%로 소속 기업체 규모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³⁾ 이에 따라 향후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에 있어서 성별 격차 및 소속 기업체 규모별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육아휴직 사용의 성별 격차와 관련하여 아버

2) 통계청(2021). 2020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p.15.

3) 통계청(2021). 2020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p.17.

지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산 및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육아휴직 소득대체를 향상을 추진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현재 통상임금의 50%, 최대 월 120만원인 육아휴직급여를 2022년 이후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⁴⁾

2019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 임금대체율 전체 평균은 45.6%이며, 중위소득계층에 해당하는 3분위(전체 5분위 기준) 임금대체율은 49.8%로 나타났다.⁵⁾ 육아휴직급여의 평균 임금대체율은 2006년 32.9%에서 2016년 28.7%까지 하락한 후 2019년 45.6%까지 상승하였는데, 이는 급여 상한액의 인상에 연동하여 증감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시계열적으로 보면 육아휴직급여의 임금대체율은 평균 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별도의 대책이 없다면 50%를 밑도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⁶⁾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022년 이후 최대 월 150만원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한다고 해도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이끌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수준일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조사와 전문가 조사에서 전체 육아정책을 대상으로 할 때 성과가 가장 미흡하다고 평가된 정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나타났다. 2019년 10월 이후 육아휴직 미사용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최대 2년으로 확대되었고, 하루 1시간 단축 허용과 함께 1시간 단축분

급여가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⁷⁾ 전문가 조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성과가 가장 미흡하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제기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기업의 상황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고, 해당 제도의 사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처우가 우려되기 때문에 제도 사용을 위한 직장 분위기 개선 등을 위한 보완책도 요구된다는 점, 대체인력 지원이 없이 기존 인력이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간접노무비 지원을 현행 월 30만원에서 2022년 이후 월 30만원(1~3호 인센티브 10만원 신설)로 개편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⁸⁾ 그러나 이러한 지원 수준은 부모가 실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현 정부의 자녀돌봄 시간 지원 정책은 육아휴직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으나, 육아휴직 기간 확대는 경력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부모조사와 전문가 조사에서 전체 육아정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제도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아동수당이다. 아동수당은 2019년 9월부터는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다. 아동수당 지급은 소득기준에 따른 제한이

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분야별 시행계획. p.6.

5) 감사원(2021). 감사 보고서-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p.145.

6) 감사원(2021). 감사 보고서-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p.146.

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분야별 시행계획. p.14.

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분야별 시행계획. p.14.

폐지되었기 때문에 포괄성은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을 보면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의해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의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OECD 32개국 중 15세 이상까지 지급하는 국가는 29개국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⁹⁾, 앞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사회적 합의 및 국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아동수당 지급 연령의 단계적 확대 추진을 검토한다는 방향을 제기하였다.¹⁰⁾ 구체적으로 초등 저학년(만 9세 미만), 초등 고학년(만 12세 미만), 중학생(만 15세 미만), 고등학생(만 18세 미만)의 순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의 단계적인 상향을 추진하는 것이다. 아동수당에 대해 부모조사와 전문가 조사의 평가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은 향후 아동수당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연령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야 할 필요를 보여주고 있다.

2017년 OECD 데이터(OECD family database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를 보면 OECD 평균 GDP 대비 가족지원 정책 예산 비중은 2.34%(현금지원 1.16%, 서비스 지원 0.95%, 세제 지원 0.23%)이지만, 한국은 1.30%(현금지원 0.15%, 서비스 지원 0.95%, 세제 지원 0.20%)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국은 서비스 지원 예산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현금지원 예산 비중이 크게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아동수당이 2018년에 도입되었으나, 그 비중은 2019년 기준 GDP의 0.16%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에¹¹⁾, 앞으로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부모조사와 전문가 조사에서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을 기준으로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함’이 76.2%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함’을 응답한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우선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반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만 0세가 3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만 1세 21.2%, 만 3세 19.8%의 순으로 나타나, 만 0세에 대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데 가장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관련하여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에 대해 어린이집 조사에서 ‘보조교사 지원으로 담임교사가 보육활동에 전념’, ‘보조교사 지원으로 담임교사의 휴게시간 보장’, ‘대체교사 지원으로 일·생활 균형 가능’에 대한 질문의 응답을 보면 어린이집 교사의 부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사 아동 비율 감축과 더불어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전문가 조사에서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을 기준으로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정책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이다. 기관 조사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모두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의 달성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분야별 시행계획. p.141.
 1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분야별 시행계획. p.142.
 11) 박선권(2020). 한국 저출산 대응 예산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p.4.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유보통합 정책을 별도로 추진하지 않고 유보격차 완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으나 실제로는 자격양성체계 및 시설기준 등 유보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은 추진되지 않은 상태이다. 유보격차 완화를 교육부 국정과제(국정과제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포함되어 있으나, 어린이집은 교육부 관할이 아니므로, 교육부에서 유보격차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유인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을 관할한다는 점에서, 유보

격차 완화에 관심을 가질 유인이 있지만, 유보격차 완화는 교육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보격차 완화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추진된 정책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2022년 5월 차기 정부 출범에 따라 유보격차 완화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 정책이 다시 추진될 필요가 있다.